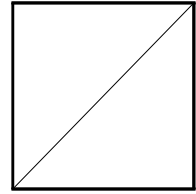


공개



의안번호	제 70 호 (2022년)
의 결 연 월 일	2023. 1. 26. (제 2 차)

의
결
사
항

쌍용양회공업(주) 등 576개사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1. 26.

1. 의결주문

- ☐ 쌍용양회공업(주) 등 576개 종목 주식의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 ☐ 2019. 4. 3.부터 쌍용양회공업(주) 등 576개 종목 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발견된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등 위법사실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 과징금 부과(118억 8,000만원) : Citadel Securities (Hong Kong) Limited [외국투자매매업자]
- ☐ 공매도 제한 위반
 - 과태료 부과(11억 1,580만원) : Citadel Securities (Hong Kong) Limited [외국투자매매업자]

4. 참고사항

- ※ 금융감독원장이 안건 상정을 요청하는 것임

가. 관계법규 : < 붙임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 제1항 제39호,
제180조 제1항

(별지)

Citadel Securities (Hong Kong) Limited에 대한 조치안

증권선물위원회는 Citadel Securities (Hong Kong) Limited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의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동법 제429조의2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과징금 118억 8,000 만원을 부과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의 공매도 제한 위반 혐의로 동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6조에 의하여 과태료 11억 1,580만원을 부과한다.

□ 피조치자의 인적사항

- Citadel Securities (Hong Kong) Limited [외국투자매매업자]
 - 주 소 : 16th Floor, 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re, 8 Finance Street, Hong Kong SAR, China

□ 조치이유

-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
 - Citadel Securities (Hong Kong) Limited는 ◇◇◇◇증권 서울 지점에 개설된 8888 88888*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2017.10.18.~ 2018.5.24. 기간 중 (주)피앤티 등 264개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 ----- (---- ----) ----- -- -----
----- (-----) -----

- 알고리즘 매매기법과 DMA 주문을 통해 일반투자자 대비 신속하게 호가·체결 정보를 입수·분석하고 매매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매매 시스템을 바탕으로 단기간 내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며
- IOC조건 주문으로 최우선매도호가 전량을 반복적으로 소진(고가매수·물량소진 매수)하여 현재가 또는 호가 상승을 유발하는 한편

호가 공백이 발생한 곳에 지정가 매수주문을 제출(호가공백메우기)하여 신규 최우선매수호가를 생성(호가 상승 유발)하고 반복적으로 취소하거나 일부는 시세 변화에 따라 매수1호가~5호가 부근에 누적적으로 쌓은 후 단계적으로 취소하는 등의 매매주문 또는 이와 동일한 패턴의 반대방향 매매주문을 단시간 내 집중·반복하는 방법으로 단기 주가 변동을 확대하는 등

- 264개 종목, 총 6,796개 매매구간(지속시간 평균 3분 42초)에 걸쳐 고가·물량소진 매수주문, 저가·물량소진 매도주문, 호가공백 메우기 주문 등 합계 169,594회, 304,963,719주(1조 8,401억원 상당)의 시장질서교란주문을 제출하여 해당 주식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가격에 대한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부당이득 : 산정 불가, 호가관여율(구간 평균) : 47.5%, 주가변동률(구간 평균) : 1.53%]

○ 공매도 제한 위반

- Citadel Securities (Hong Kong) Limited는 ☎☎☎ ☎☎☎☎☎* 및 ☎☎☎ ☎☎☎☎** 명의 증권계좌를 운용하며, 동사들이 해당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 ===== (=====) ===== == ===== == =====
 ===== ===== =.=.=.=.

** ----- (-----) ----- -- ----- -- -----
 ----- (-----) ----- ----- -----

2016.11.25.~2019.5.9. 기간 중 7일 동안 총 165회에 걸쳐 BGF
 보통주(4,211주) 등 총 25개 종목 150,106주를 공매도한 사실이
 있음

< 붙임 >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① (생략)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행위가 제176조 또는 제17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생략)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하여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80조 (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 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생략)

제429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제178조의2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 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4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8. (생략)

39.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

40.~49. (생략)

②~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⑥ (생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① (생략)

②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매도(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이하 "증권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2.3., 2012.6.29., 2013.1.16., 2013.8.27., 2016.6.28.>

1.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가.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나.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다.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08조의2에서 같다)에 공매도 주문을 하지 아니할 것

라.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2.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3. 삭제 <2016.6.28.>

③~⑤ (생략)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개정 2016.6.28.) 과태료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태 료 금 액
으.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	3,000

[별표 22] <개정 2017.10.17.> 과태료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과 태 료 금 액
스. 법인인 자가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 제39호	6,000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 2020. 1. 16., 금융위원회고시 제2020-4호, 2020. 1. 16. 일부개정)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과태료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4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금융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등을 참작한 부과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할 수 있다.

제48조(준용규정)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7.14.>

1.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2020.1.16. 삭제)

2.~3. 생략

부칙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과태료 부과 대상행위에 대하여는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가 행위 당시 규정에 따라 산정한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2020.1.16. 신설)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2. 통칙

가. 동 규정에서 '법정최고액'이란 이 기준 3.에서 규정하는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의 상한을 곱한 금액(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 다만, 법 제429조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7.14.>

3. 기준금액과 기본과징금의 산정

바. 법 제429조의2의 경우 <신설 2015.7.14.>

(1) 기준금액은 법 제178조의2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이익 포함)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이나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178조의2제2항제1호, 제2호, 제4호와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천만원으로 한다.

(2) 기본과징금은 기준금액에 이 기준 4.에서 규정하는 부과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부과비율의 산정

가.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 및 감안사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4) 법 제429조의2의 경우 <신설 2015.7.14.>

위반행위의 중요도 감안사유	상	중	하
상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50	100분의 125	100분의 100
해당사항 없음	100분의 125	100분의 100	100분의 75
하향조정사유 발생	100분의 100	100분의 75	100분의 50

나. 위반행위의 중요도 판단기준

(3) 법 제429조의2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한다. <신설 2015.7.14.>

중요도 구분	상	중	하
법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불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수회 위반	특정인 대상으로 1회 이상 위반 또는 특정 다수 대상으로 1회 위반

다. 감안사유 판단기준 <신설 2015.7.14.>

구 분	조 정 기 준
상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행위를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시위반행위로 조치(경고 및 주의 제외)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공시위반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는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또는 부정거래행위 금지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이후 1년 이내에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위반을 한 경우 3개 이상 종목에 관여하여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경우
하향 조정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거나, 조사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부도발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를 개시하거나,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개시한 경우 또는 위반행위시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실질적으로 교체되어 기업회생과정에 있고 과징금 부과로 인하여 소액주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단순투자목적의 주식취득의 경우*

* 5%보고 위반의 경우에 한함

[별표 제2호의2] 과태료 부과기준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질서 위반행위규제법」 및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정금액을 산정한다.

나. 다만,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과태료 부과비율 기준

동기 결과	상	중	하
중대	기준금액의 100%	기준금액의 90%	기준금액의 75%
보통	기준금액의 90%	기준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
경미	기준금액의 75%	기준금액의 50%	기준금액의 25%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위법행위의 동기

- a. 상 :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 b. 중 : 위법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법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별히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닌 계속·반복적 위법행위 등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 c.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만,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위법행위의 결과

- a. 중대 : 위법행위로 인하여 공정한 가격 형성(호가의 형성 포함), 증권시장의 안정성 등을 저해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 b. 보통 : 기타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c. 경미 :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격 형성(호가의 형성 포함) 및 거래량 등 시장에 미친 영향이 매우 미미하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다만, 위법행위가 호가 규제 위반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2016. 7. 25., 금융위원회고시 제2016-28호, 2016. 7. 25., 일부개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2016.7.25. 개정)

3. 예정금액의 산정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고의	과실
중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75%
보통	법정최고금액의 75%	법정최고금액의 50%
경미	법정최고금액의 50%	법정최고금액의 25%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12.20>

- (1) 중 대 :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및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개정 2013.12.20>
-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 (3) 경 미 : 단순법규 위반 등을 의미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나. 감경 사유

-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 시정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3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 2017. 10. 19., 금융위원회고시 제2017-38호, 2017. 10. 19., 일부개정)

<별표 3> 과태료 부과기준(2017.10.19.개정)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위반결과 \ 동기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나. 감경 사유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3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자본시장조사총괄과	조사기획국
연 락 처	02-2100-2605	02-3145-5560